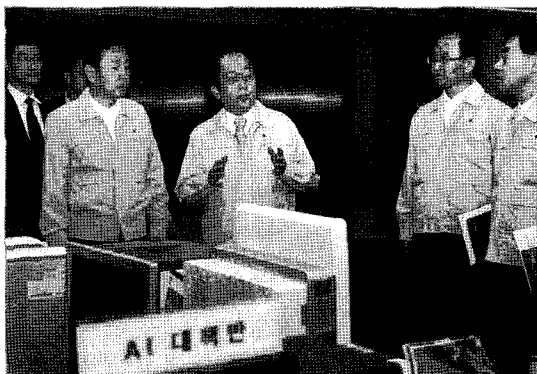


올 한해 계육업계 어떤 일이 있었나?

편집부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2011년도를 이틀 앞둔 2010년 12월 29일 충남 천안 풍세면 종오리 농장과 전남 익산시 망성면 육용종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했다.

이번 HPAI는 마지막 발생일인 2011년 5월 16일까지 6개 시·도, 25개 시·군·구에서 총 53건이 발생돼, 닭과 오리 등 가금류 6,472천수가 매몰 처리됐다.

이번 AI는 2003년 12월~2004년 3월(102

일간 10개 시·군에서 19건, 2006년 11월~2007년 3월(104일)간 5개 시·군에서 7건, 2008년 4월~5월(42일)간 19개 시·군에서 33건 발생했던 것에 비해 발생 건수도 많았고, 기간도 길어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다가 올해는 옆친데 덮친 격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역이 발생, 보상금만 해도 3조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9월 6일자로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했으며,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겨울철 재발 가능성이 있는 AI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0월 6일부터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금류 사육농가 등 축산관계자는 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 방문

을 금지하여 줄 것과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주기를 당부했다.

2. 닭고기 5만톤 무관세 수입

지난 3월 한파로 인한 생산성 하락에, 연초부터 발생된 AI로 장기간 입추가 제한되고 육계 출하가 늦어지면서 물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신학기 수요증가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대체수요에 가수요까지 겹치면서 육계 가격은 2011년 2월 평균 kg당 2,475원이었으며, 3월 평균 가격은 2,664원, 4월 2,583원 등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닭고기 5만톤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추진했다.

이에 5월 한달 닭고기 수입량은 21,442톤으로 4월(7,261톤)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그동안 병아리 입식증가가 계속되고 생산성도 향상되어 공급량이 전년보다 늘어나 오히려 육계 가격은 5월 평균 1,800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를 두고 닭고기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통닭 형태가 소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닭고기 시장을 부분육 형태인 수입으로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수입육만으로 시장 수급을 조절하거나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3.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 발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6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축산업 허가제의 경우 도입시기를 구체화해서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 등 3개 업종은 규모와 관계없이 2012년부터 즉시 이를 실시하기로 했다.

가축사육업의 경우 소, 돼지, 닭 등 가축 종류별 사육규모에 따라 내년에는 전업 규모의 2배 수준 이상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2013년엔 전업농, 2014년엔 준 전업농, 2015년에는 소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축산농가의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규 축산농가는 곧바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업농은 농업소득 6천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한 사육두수로, 소의 경우 50마리, 돼지 1천마리, 닭 3만마리, 오리 5천마리가 기준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허가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고 허가기준을 어길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소독 의무 등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할 경우 즉시 허가가 취소된다.

또 향후 구제역이나 AI와 같은 가축 질병으

로 매물 처분하는 경우 축산농가의 책임이나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매물처분 시 현재는 100% 보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양성 확인 농장은 시가의 80%만을 지원하고, 축산농가가 해외여행 시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한 경우 80%를 감액키로 했다.

또 역학조사 비협조, 출입자 기록관리 미실시, 이동제한기간 가축 출하 및 가축방역관의 허가 없이 2인 이상 모임을 갖는 등 방역의무 준수사항을 어겨 질병이 발생하면 20~60%까지 감액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0일 축산업 허가제 등이 포함된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4. 하림그룹, 국내 최초로 미국 닭고기시장 진출

국내 최대의 축산전문기업인 하림그룹(회장 김홍국)이 미국내 19위 닭고기 업체를 인수해 닭고기 산업의 본고장에 진출했다.

하림그룹은 지난 7월 29일 오전 미 동북부 델라웨어(Delaware)주 윌밍턴(Wilmington)시 소재 파산법원의 청문회에서 알렌패밀리 푸즈(Allen Family Foods)사의 자산 입찰 결



과를 최종 승인받았다.

이번 경매입찰을 통한 1차 자산인수에만 4,800만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알렌사의 본사 건물, 부화장 2개, 도계가공공장 2개, 사료공장 2개, 렌더링공장 1개, 사육농장 400여만평을 확보한데 이어 실사를 거쳐 재고자산을 추가 인수하고 설비개선 등에 추가 투자하여 직접 경영하게 된다.

이번 하림그룹의 미국 닭고기 산업 진출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단백질 식품(육류)에 대한 해외식량기지 확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내 업계 순위 19위인 알렌사가 연간 22만톤의 도계육 생산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닭고기 역수출을 통해 국내 계육산업을 말살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홍국 회장은 말살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육계산업의 생산성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계 수정률이 평균 97%에 달하는 알렌사의 선진기술을 국내 접목하면 현재 8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하림의 생산성만 끌어올린다고 해도 연간

24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5. 이지바이오, 사조그룹 계육업계 진출, 닭고기 시장 재편



올해는 유독 거대 기업들의 닭고기 시장 진출이 많았던 해이다. 이중 가장 핫 이슈는 (주)이지바이오시스템의 (주)마니커 인수다.

2010년 10월 성화식품(주)를 인수하면서 계육업계 진출한 (주)이지바이오시스템(대표 이사 지원철)은 올해 6월 (주)마니커를 인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육계 계열화사업에 나서게 되었다.

게다가 지난 9월에는 서울대학교와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와 연계한 친환경 동물복지형 가금전문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주)마니커와 서울대 기술지주회사가 각각 출자해 설립되는 이 회사는 앞으로 서울대의 연구개발 성과를 제품화한 친환경 안전 계육·계란의 생산을 시작으로 오리고기 및 가공품 사업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사조그룹(회장 주진우)은 (주)하림의 계열사였던 (주)육성을 인수하고, 축산사업

강화에 나섰다.

사조그룹은 지난 4월 27일 계열사인 ‘사조바이오피드’를 통해 ‘육성’을 인수하고, 계육 사업부문의 수직계열화 완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사조바이오피드는 충남 홍성소재 사료공장을, 사조아그로는 전남 곡성 소재 종계장을 각각 인수한 바 있다.

이같이 사조그룹은 신수종 사업으로 축산 분야와 육가공 식품사업을 선정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사조그룹이 축산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그룹내 기존 사업부문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단시간내에 국내 상위권 업체로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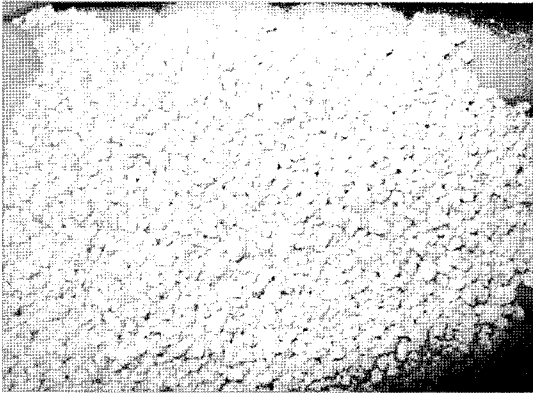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축산업이 대기업 위주로 새 판이 짜여지는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 기업들은 계열화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안정적인 시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6. 7월 1일 배합사료 내 항생제 전면 사용 금지

올해 7월 1일부터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가 전면 금지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사료 내 미생물 및 세균의 성장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이전까지 44종의 항생제를 사료에 섞어 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사료에 항생제를 과하게 첨가해 축



산물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인체에 위해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는 항생제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초기 44종에서 2005년 16종을 금지했고, 2009년에 9종, 그리고 2011년 7월부터는 배합사료 내 모든 항생제 첨가가 금지되었다.

육계용 배합사료 내에는 아무런 항생·항균제도 첨가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단지, 콕시듐병 예방약제 만이 첨가될 수 있다.

육계용 사료 전기와 후기에 콕시듐병 예방을 목적으로 살리노마이신(44~66ppm), 모넨신(100~121ppm), 나라신(60~80ppm), 라살로시드(75~125ppm), 샘두라마이신(25ppm), 마두라마이신(5ppm), 디클라주릴(1ppm), 클로피돌(125~250ppm) 등이다. 출하용 사료에는 이것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료용 항생제 사용이 금지되면 육계산업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문제는 사료 섭취량이 줄면서 증체가 더뎠고, 당연히 사료요구율이 올라가며 피사성 장염(NE)의 질병발생이 증가하면서 폐사율이 높아지는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단

계별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종계장에서는 정밀한 사양관리와 백신으로 난계대 질병을 차단하고, 장염에 내성이 강한 품종의 육종이 필요하다. 부화장에서는 최적의 선별 백신과 엄격한 병아리 선발이 필요하다. 농장에서는 장염 발생의 주요 원인을 철저히 차단하고 적절한 사육 밀도를 유지하여 계군의 건강과 균일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축산계열화사업법 제정



국내 축산업은 FTA와 DDA로 인한 시장 개방, 구제역·AI 등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 이 상기온에 따른 재해증가,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악화 등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축산계열화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기반 구축에 부족한 점이 있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고자 '축산계열화사업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축산계열화사업법'은 의원입법으로 진행되어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 있다.

아직까지는 진행형이지만 제8장 제34조로 구성된 축산계열화사업법이 제정되게 되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칙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 법률안에서는 정부가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련부처와 협의,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생산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사육자재의 품질기준과 농가의 사육시설 기준도 정해지며 사육경비의 지급기준도 마련된다.

아울러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제도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8. 한·미 FTA 국회 통과

지난 11월 22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본회의장에서는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최루탄이 터지는 헌정 사



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듯 한·미 FTA 비준안의 강행 처리로 국회 파행은 물론이고, 한·미 FTA 비준 반대를 위한 온 농·축산인들을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미 FTA 발효 시 닭고기는 총 27개 품목이 대상으로 양허세율은 평균 20% 내외다. 양허기간은 대부분이 10~12년 정도이다.

현재 닭고기 수입규모는 2010년 기준 국내 소비량의 20% 규모인 약 10만5천톤 정도로 FTA로 인한 닭고기 업계의 피해규모는 관세를 철폐하는 해를 기준으로 연간 331억원으로 농경연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내로 수입되는 닭고기의 60% 정도를 점유하는 국가로 FTA 타결 시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회는 FTA 타결에 앞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예산지원 부문과 제도개선 부문 등 총 16개항을 관련 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